

인권위 “軍 언론 인터뷰 제한 최소화해야”

‘부대 보안사고 은폐 의혹’ 제보한 군무원 언론 인터뷰 승인 거부되자 인권위 진정 軍 “재판·수사 중이라…훈령 근거한 판단” 인권위 “재량으로 표현 자유 제한” 지적

국방부가 군인과 군무원의 언론 인터뷰를 제한할 때는 명확한 사유와 기준과 함께 이의 신청 절차를 뒤 표현의 자유 침해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홍보훈령’ 개정으로 군인·군무원에 대한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허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 홍보훈령은 군인이 언론 보도 등 홍보 때 각급 기관 승인권자의 통제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예 비전력관리 업무를 하는 5급 군무원 A씨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를 부대가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후 공문화를 하기 위해 A씨는 한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려고 부대장에게 계획을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군인이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 부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군 내부 규정을 육군 측이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군대 내 보안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관련 민원·고소·고발 등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A씨는 2021년 하반기 군무원 평정에서 부정적인 내용 평정 의견을 받았고 지난해 성과연봉도 D등급을 받았다. 그는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신분보장조치가 내려졌다.

육군 측은 인권위에 군인복무기본법과 국방홍보훈령에 따라 승인권자가 A씨를 통제했다고 답했다.

또 “A씨가 재판과 다수 사건 수사에 연관돼 있어 해당 사건의 다른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점, A씨의 개인 의견이 육군의 공식적 의견으로 비칠 수 있는 가능성, 과거 사건 연루자에게 언론 매체와의 공식 인터뷰를 승인했던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검토해 (언론 인터뷰를) 불승인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군인복무기본법에 규정된 일부 규정의 해석 여지가 커 규정 적용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 군인복무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규정된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은 해석 재량이 커서 규정 적용 시 개별 부서의 실무적인 절차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방법으로는 승인권자의 언론 인터뷰 불허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인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서선욱기자



완도해경, 신입직원 “온보딩 간담회” 열GO, 소통海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18일 입사 3년 미만 경찰서 및 파출소·항정 직원 대상으로 소통 온보딩(On-boarding)간담회를 개최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나주경찰,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나주경찰서(서장 장진영)에서는 지난 18일 하반기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나주=송준표기자



순천경찰,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만들기 캠페인 펼쳐

순천경찰서(서장 김남희)는 19일 순천 남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순천 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합동으로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순천=김승호기자



구례소방, 산간계곡에 고립된 등산객 안전 구조

구례소방서(서장박상진)에서는 지난 16일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산인근 등산로에서 고립되어있는 등산객을 안전하게 구조한 사실을 뒤늦게 전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소방, 전통시장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교육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지난 18일 담양군 대전면 대전 5일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및 방수훈련을 실시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 남부소방,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지난 18일 남구 진월동 소재 광주대학교에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주·전남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입건 49건...구속 수사는 '1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소방청 제출 자료 분석

광주·전남에서 지난 5년 동안 구급대원을 폭행해 입건된 사례가 50건에 육박하는 상황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단 1건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91%가 주취자로 확인되면서 구급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대원들에 대한 안전 확보와 가해자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집계된 구급대원 폭행 관련 입건 사례는 49건(광주 30건·전남 19건)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5건을

기록하다 2020년 6건으로 증가, 이듬해 4건으로 줄어든 뒤 2022년 5명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벌써 5명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누계와 동일하다.

광주 지역에서 입건된 가해자들은 대부분 벌금형(13건)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1건) 처분을 받았다.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6건으로 확인된 상황에 기타 종결된 사건도 10건에 달한다.

전남에서는 2018년 1건에서 이듬해 4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3건으로 줄었다. 2021년 5건으로 늘어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22년 4건으로 줄어 올해 8월 현재 2건을 기록하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 집계된 19건 중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처벌은 벌금형 7건, 징역형 4건, 기타 4건

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4건이다.

광주·전남에서 입건된 전체 49건 중 구속 수사로 전환된 사건은 전남 1건만이 유일하다. 가해자 중 주취자는 45명에 달해 전체 입건 수의 91%에 육박한다.

지난해부터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하는 관련법(소방기본법)이 시행됐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구급대원들이 여전히 주취자의 폭행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슬비기자



“교사인권 존중하라!”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 연합회들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교권보호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비정규직 10명 중 4명 ‘빨간날’ 못 쉬어...“휴식 양극화 현상”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이른바 ‘빨간날’(명절·공휴일)에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빨간날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규직 노동자의 86%가 빨간날에 유급으로 쉬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42.8%만이 유급으로 쉬 수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77.4%는 빨간날에 유급으로 쉬 수 있었다고 답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의 47.3%만이 빨간날에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답했다.

임금별로 보면, 50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10명 중 9명(90.3%)이 빨간날에 유급으로 쉬다고 답했고, 150만원 미만은 받는 노동자는 10명 중 3명(31%)이 빨간날에 유급으로 쉬다고 답했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도 빨간날 유급휴가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 조사 결과, 노동조합 비조합원(66.2%)은 조합원(86.9%)보다 유급휴가를 더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직장 내 지위와 근로기간에 따라서도 유급휴가 사용 여부가 갈렸다.

일반사원 2명 중 1명(50%)은 빨간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실무자급 이상의 경우 10명 중 8명 이상이 공휴일에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직장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2명 중 1명(50%)이 빨간날에 유급으로 쉬 수 있었다. 5년 이상 근무자는 10명 중 8명(84.2%) 이상이 유급으로 쉬 수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60%)보다 남성(75.4%)의 유급휴가 사용 응답이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직장에서의 취약한 지위가 빨간날 휴식할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